

입법정책정보

-제15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 목 차 ■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9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8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21
1.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1
2.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29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33

I 상위법령 제 ·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89호, 2024. 3. 5.,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군·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군·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군·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 가. 해당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

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9.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조의2(협의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생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임기) 심의회 또는 협의회(각각의 심의회 또는 협의회를 말하며, 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등을 대표하고, 심의회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등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3호, 2024. 3. 1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실시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치매정보시스템 등으로 정하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726호, 2021. 10.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주요 시책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또는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방문간호 서비스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4.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5.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18호, 2024. 3. 26.,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시행 2023. 10. 6.] [대전광역시조례 제6104호, 2023. 10.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에 관한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 ·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 · 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성 재원 및 규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 가. 지원 목적
 - 나. 지원 기간
 - 다. 지원사업의 내용
 - 라. 지원 금액
 - 마. 지원 대상지역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등의 현황
 -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계획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등의 현황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2. 4. 15.] [대전광역시조례 제5845호, 2022.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
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3.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광역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광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광역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광역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광역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 비용

제5조(폐기물 반입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권고하는 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광역시설의 관리·운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차등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월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해당 구의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역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광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구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광역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제8조 삭제 <2018.8.10.>

제9조(기금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조성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1) 및 (2)의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대형폐기물(폐 가구류 등) 파쇄시설
- 나. 음식물(음폐수 포함) 처리시설
- 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산정 비율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18.8.10.>

제11조(기금 운용) 기금운용은 폐촉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 및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4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광역시설 설치 후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폐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위탁)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4.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2호, 2024. 3. 26.,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교육청의 교육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 개인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시행 2023. 4. 21.] [대전광역시조례 제6032호, 2023. 4.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2. 자립지원 사업
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4. 급식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34호, 2024. 3. 15., 제정]

□ 제정이유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어르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년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중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립병원
 - 다.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3. “어르신안심주택(이하 “어르신주택“이라 한다)“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자인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4.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5.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4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7.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어르신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르신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②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어르신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②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2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의 경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유형) 어르신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어르신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어르신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어르신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어르신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

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어르신주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의 사업유형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어르신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어르신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어르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르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어르신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상업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2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② 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어르신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어르신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토지주의 사업 대행 및 사업성 분석

4.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6. 어르신주택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등

7.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8. 임대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어르신주택의 공급 등

제15조(어르신주택의 건설·공급) 어르신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건설 규모 및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어르신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 양도, 최초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 책정 및 나눔카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어르신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할 수 있다.

② 소득·자산·차량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어르신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어르신주택 건설 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7.] [울산광역시조례 제2899호, 2024. 3. 7., 제정]

□ 제정이유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시민의 안전 보호 등을 포함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등 지원)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

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007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의뢰안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의결기관을 말하며(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 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장대표, 유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등 각 호의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영등포구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자치회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할 뿐 그 심의·의결에 동장 또는 구청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그 의사와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038 /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 의뢰안전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각주: 해당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조), 5년마다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제5조)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마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빈집 사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을 예외적인 지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안의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시장·군수등, 빈집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를 말하고,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의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4. 의견제시 20-0307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보조금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7쪽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치법규 형식인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3월 8일, 이혼 후 부모 공동의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친권” 도입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혼 후에는 부모 중 한 명의 단독친권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이혼 후에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으로 할 지를 부모가 협의하고, 의견이 대립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성립되면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제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부모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혼 시에 공동친권으로 할지 단독친권으로 할지 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이익”의 관점에서 친권자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독친권이 된다.

양육비의 성실한 지급이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조기 교섭을 장려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양육비” 제도와 조정·심판 절차 중에 가정 법원이 시범적으로 면접교섭을 장려하는 제도의 신설이 포함되었다.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을 둘러싸고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체제 강화, 친권자 결정 시의 규정 해석 방향 등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방지하는 지원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3. 15.